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첫 번째 이야기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일시 : 2017년 7월 6일 (목) 오후 3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광주시협회, 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광주마당, 윤상원기념사업회

□ **후원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 프로그램

사 회 : 박선정(광주대 겸임교수)

발표	▪ 박해광(전남대 교수)	▪ 염방열(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토론	▪ 김병설(아시아문화원장) ▪ 박강배(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 박진현(광주일보 편집부국장)	▪ 김인설(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 목 차

1. 발표 (1) 박해광 전남대 교수 ---------- 05
2. 발표 (2) 염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23
3. 토론 (1)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 ---------- 39
4. 토론 (2)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 41
5. 토론 (3)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 43
6. 토론 (4)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47
7. 토론 (5)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 49

발표문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박 해 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박 해 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상관성

박근혜 탄핵과 함께 시작된 숨가쁜 정치일정 끝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이제 2달여가 되었다. 보수 이념편향적 정부의 편파적인 지배는 결국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귀결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결과를 촉발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지원 배제를 낳은 '블랙리스트'나, 미르-K 스포츠 재단을 통한 불법 뇌물 등과 같은 '문화예술 정책'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적폐 청산의 사명을 갖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문화예술 정책에서 이전의 박근혜 정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지향과 목표를 가질 것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이런 배경 하에서도 대선 공약에서 문화예술정책이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그 이념과 정책 목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것이 지역문화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내용

1) 대선 공약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대선 공약 자료집에 잘 제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슬로건은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인데, 이의 구체적 모습으로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 '문화 다양성', '문화로 대한민국의 품격 향상'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핵심 아젠다는 9개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균형발전',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건설',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 사회 실현',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청산' 등이 그것이다.

○ **슬로건: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
  ▸ '문화 다양성 추구'
  ▸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
  ▸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임'

○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 추진
  ▸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 민간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국내 출판 작품들의 해외 보급사업 확대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컨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 공정한 문화컨텐츠 제작환경 구축
  ▸ 문화컨텐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컨텐츠 발굴 육성

►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컨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컨텐츠 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균형발전**

►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 우선 지원

►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선택적 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출연

►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 폐산업시설, 원도심 노후건물, 지하도·지하상가 등 활용 지역문화재생 사업 지원

▸ 민간주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 지원,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건설**

►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로 전환

►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협력

○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 육성

▸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영향평가제도, 국민관광신탁제 도입

<언론>

○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 **지역방송 활성화**

► 지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을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지원 확대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추진

► 지역방송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건강한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 지역방송 지원예산의 현실화 및 예산의 컨텐츠 개발·유통 지원에 특화

○ **지역신문 지원**

►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시장 활성화 추진

►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및 지역신문의 디지털 사업·재교육 지원 확대방안 추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당 문화공약, 2017.4.25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 기본 정신: "자율, 분권, 협치"

► 문화자유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

▸표현의 자유

► 문화창작권

▸향유지원만 증가, 창작지원 감소

▸문화창작은 공짜가 아님, 순수예술의 자생적 기반 구축

▸유통중심 문화산업 구조로 창작인과 중소제작사의 창작 기회 제한 재선

► 문화경제권

▸열정페이, 불공정 수익배분 개선

▸예술인 복지 법제화

► 문화향유권

▸소득, 지역, 연령에 따른 문화불평등 개선

▸생활창작 지원--> 생활문화

► 문화자치권

▸지역문화재정 확충: 국제/지방세 8:2 비율 개선

▸ 지역문화재단의 정부 위탁기관화 개선
- 획일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 반영 한계
-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역문화재단의 비정규적 증가, 경영악화
- 학교 예술강사 근로계약 문제를 지역문화재단에 전가

2) 문재인 문화예술 공약의 특징 분석

문화정책 공약의 슬로건은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며, 그 핵심 정신을 '자율, 분권, 협치'로 제시하고 있다.[1] 이 공약은 5개의 문화적 권리, 즉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약에서 가장 강조점이 두어져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문화예술인 창작 및 복지에 대한 공약이다. 지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문화예술인 복지 문제에 대한 강조, 그리고 블랙리스트 청산을 바탕으로 수립된 문화정책이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반 권리의 강조와 함께 복지의 확대는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시혜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둘째, 일상에서의 문화 향유에 대한 강조는 참여정부에서 강조했던 생활문화의 이념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생활을 국민의 기초적 권리로 규정하고, 동네(neighbor)를 문화적인 공간이자 생활문화가 추구되는 공간으로 정의한 것은 생활문화 이념의 연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이념에도 부분적으로 등장했고 '문화의 날'과 같은 방식으로 실현되었지만, 사실상 생활문화는 주된 정책이 아니었다. 문화를 예술로 부터 확장하여 생활문화로 규정한 참여정부의 문화 이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상의 문화향유와 일상의 문화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균형지수 개발이나 지역문화재생사업 등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으로서 평가될 수 있고, 문화도시 개발은 참여정부 문화도시 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지역 균형 및 특화 문화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관광에 대한 강조 역시 주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관광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및 지역 특화를 통한 균형 발전과도 긴밀히 연결되

1) 2017.4.25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한편 이것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 이념이었던 '자율, 분권, 참여' 이념과의 유사성 및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어 있다. 이런 점에서 관광 정책은 지역마다의 고유한 관광 자원을 특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이러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정책과 함께, 문화예술 행정에서의 뚜렷한 변화들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지원의 공정성 제고, 문화예술 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집행의 민간위원회 이양 등의 문제들이 행정상의 중요한 쟁점이자 정책 방향으로서 토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 요구 문화예술 지원의 주요 내용

1) 광주광역시 비전 프로젝트

■ 슬로건: "45억 아시아인이 찾는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완성(11,824억)**
- ► 사업기간 연장
- ► 7대문화권 조정과 완성을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 국고보조 현실화

○ **무등산, 남도피아로 조성(1,200억, 400/400/400)**
- ►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
- ► 호수생태원 등 탐방로 조성

○ **미디어아트 창의파크 조성(800억)**
- ► 도시 전역을 9개 미디어아트 권력으로 특화

○ **송암 문화콘텐츠밸리 조성(15,000억)**
- ► 송암산단, 콘텐츠 교육·체험 및 문화기술고도화 기반 콘텐츠 퓨처랩 건립
- ► 체험형 콘텐츠 및 특수 영상물 제작 복합 촬영스튜디오 건립

2) 광주 경제단체 공약 건의

○ **문화관광 명품도시 조성**
- ► 자동차복합문화관 건립(1조)
  - ▸ 제2자동차 도시
  - ▸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 ▸ 자동차산업과 문화의 결합

► 무등산 Geo 테마파크(2조)
▸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준비하며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 지질학습관, 체험관 등.
► 문화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 7개 문화권 사업 추진
▸ 국비 사업비의 특별회계 편성, 국비비율 확대

○ **미래건축 중심도시 구축(1조)**
► 건축도시 융복합디자인・사업화기술연구센터 건립
► 건축자재 데이터뱅크・빅데이터 분석센터 구축
► 스마트 건축・도시재생・친환경 건축기술 특화단지 조성
► 미래형 전시관 및 스마트 안전체험관 운영 등

3) 시민문화예술단체 10대 핵심 추진과제

○ 팔길이 원칙 실현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
○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공익 이사제 도입 및 지역 참여 비율 확대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 조성 및 지역문화 분권 실현 방식으로 분배
○ 광주역사박물관 건립,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 미디어아트 창의파크 구축
○ 청년 문화 육성 지원법 제정
○ 청년복합문화공간 건립, 청년문화인 기본소득 보장, 청년문화인 뉴딜 일자리 창출
○ 조성사업 특별법 시효기간(2026년->31년) 및 조성사업 목표기간(2023년->28년) 연장
○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비 비율 확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추진단 정상화, 문화전당 운영협의회 구성
○ CT연구원 설립의 조속한 재 추진

4.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경로의존성

1)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책은 여러 점에서 참여정부와의 연속성 하에서 이해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 역시 참여정부의 정책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 이념과 철학, 앞으로의 전개 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문화정책의 핵심을 '창의한국'이란 슬로건으로 집약하고, 5개의

정책 목표를 국가발전을 이끄는 문화, 문화·관광으로 지역균형발전, 문화로 국민통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등으로 설정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몇가지 점에서 이전의 정부와 뚜렷하게 다른 이념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를 예술이나 문화재 등의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라는 광의의 (인류학적)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문화를 '인간의 발전'이라는 관념(교양적이며 정신적인 개념)을 부가했다.

둘째,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는 경제나 정치와 대비되는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부여했다. 문화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을 생산자 및 시설 중심으로 명확화하면서 결과들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는 때로 과도한 문화의 '산업화'로 비판받기도 했다.

셋째, 예술·문화시설 중심에서 '정신·생활·역사·공간문화' 등으로 확산시키는 '공간의 문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문화도시 건설 등의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넷째, 문화와 관광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적극적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관광이나 문화도시 사업, 지역 문화산업 기반 확충 등 공간의 문화화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특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뚜렷한 문화예술정책 기조로 예상되는 것은 '지역 분권'과 '문화민주주의'이다. 분권은 지역 균형발전의 전망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집행자가 될 것을 지향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후속 논의들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지역분권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운영의 자율·독립성 보장'과 같은 공약의 구체화, 지역별 문화예술기금의 조성 등의 정책이 예상된다.[2)]

문화민주주의적 전망 하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방향은 생활문화 집단에 대한 지원의 확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생활문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확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이미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조할 수 있다.

2)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계승 보다는 청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청산을 약속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을 천명하였고(팔길이 원칙 준수),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문화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이었던 '문화융성' 및 문화융성위원회는 폐지를 천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 지출만 해 온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대책이 법제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의 여파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복지, 창작활동의 자유 보장 등의 정책 역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직접 문화예술 부문에 개입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간접적 지원 원칙(팔걸이 원칙)을 고수하고, 협치와 분권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지역문화 발전의 요건

1) 일상의 문화화와 생활문화 진흥: '생활문화, 생활체육, 생활관광'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일상의 문화, 여가, 삶의 질 등의 문제의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런 문제의식은 참여정부 이래 강조되어 온 생활문화의 확대와 문화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일중독사회 탈피, 노동시간 축소, 비정규직 철폐 등의 노동, 경제 및 사회 정책과 맞물려,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여가의 활성화, 일상생활의 문화적 향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사회에서 여가사회'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우선 사회경제적 변화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제화), 칼퇴근 문화, 최저임금 상승 및 생활임금 확대, 연월차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시도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과로 노동의 축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구문제 해결, 나아가 여가사회로의 진입 등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정책 추진 하에서 일상의 문화화는 새로이 창출되는 여가시간을 문화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장려, 생활문화 클럽, 동아리 등 대중의 예술 창작 및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클럽이나 동아리, 평생교육 등을 통해 창작자, 기획자 및 매개자와 시민이 만나는 일상적 문화활동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공약에서 명시되었듯이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 매개자들의 비중 역시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 매개자들의 노력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문화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비예술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의 확대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등산, 체육, 음악감상, 여행, 관광 등 능동적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질적 개선이 정책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또한 관광정책 등과 맞물려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연계될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분권과 지역문화 특화

문재인 정부의 지역분권과 자치에 대한 철학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분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후보 시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지역 자치권 보장을 밝힌 바 있다.[3] 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도 언급했는데, 이는 임기 시작 후 6월 14일 시도지사 오찬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4]

이런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문화는 분권과 문화민주주의를 화두로 하여, 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부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권과 문화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추구될 지역문화 정책은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의 특화와 진흥'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분권 정책 하에서 지역문화의 특화와 진흥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혹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재단(혹은 위원회)과 지자체가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정책과 틀을 짜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문화예술 재정의 이전, 문화재단(혹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협치적 성격 강

3) 2017년 4월 국회 개헌특위.
4) 제2국무회의는 법제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음.

화 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할 특화 전략을 지역 전체 차원의 협치를 통해 구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문화 연계 정책이 예상된다. 생활문화를 일상 속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술 및 문화활동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들의 형성 및 여러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행정, 창작, 매개, 향유의 각 주체들이 함께 정책에 참여하는 협치 모델과,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들에서 드러나듯, 일상의 문화화와 생활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공간들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공간 확대는 또한 도시 재생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이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정도로 지역문화의 담당 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을 것이며, 지역문화는 예술, 향유, 창작, 산업, 관광, 지역 정체성 등이 결합되는 매우 복합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3)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추진이 미미했던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 문화도시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역 분권과 특화의 기조 하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며, 문화중심도시 사업 역시 예산의 마련과 집행, 또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표 1> 문화도시 현황

	광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
법적근거	특별법 (2006.9)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계획수립	종합계획 (2007.10)	종합계획 (2005.10)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9.12)
계획기간	20년 (2004~23)	8년 (2004~11)	20년 (2006~35)	20년 (2007~26)	22년 (2009~30)
사업비	5.3조원	1천6백억원[5]	3.4조원	1.7조원	1.3조원
주요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7대문화권 특화발전	4개 핵심과제	4대선도 사업군(65개 전체사업)	4대선도 사업군(64개 전체사업)	5대선도 사업군(57개 전체사업)

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광주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정책으로부터 '시민주도의 생활문화' 활성화로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전당의 기능을 시민 주도의 생활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격차 해소도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서, 폐산업시설, 원도심 노후건물, 지하도·지하상가 등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및 도시를 재생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참여와 향유를 확대하는 재생하는 전략이 추진될 것이다. 문화를 통한 도시 및 지역 재생 정책은 대표적으로 영국 글래스고처럼,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예를 들면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1994~2000)은 범위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20여개에 달하던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과 구분되는 체계와 수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사회·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잘 갖추어진 문화도시로의 재생'을 목표로서 명확히 설정하고, 노후건물의 개조(주거 및 상업), 지역의 쾌적성·안전 확대 --> 긍정적 도시이미지 형성: 유럽 문화도시 지정, 문화예술자원 활용 -->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확대로 이어지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지역문화 정책의 복합성

중앙정부의 문화에 대한 관점, 그리고 문화예술정책의 이념은 뚜렷이 변화해오고 있다.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수단은 민족문화나 문화유산에 대한 강조로부터, 문화 향유와 복지, 문화산업, 지역 문화 등에 대한 강조로 점차 변화·발전해오고 있다.

5) 4개 핵심과제에 대한 추정사업비이며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상 전체 실행과제 44개를 수행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6,938억원이다.

<표 2>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추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특징	국민계몽, 민족문화 강조	문화의 중요성 인식, 문화복지개념 도입	문화산업 중시, 민간참여활성화, 문화개념 확장	생활문화, 문화의 일상화
	이념	반공, 주체성, 정체성	평등과 효용, 창의, 자율성과 다양성	형평성, 경제성	문화민주주의 문화균형발전
	목적	국민계몽, 민족의식 함양, 민족문화 중흥	문화향수기회 확대, 창작 지원, 문화의 산업화·정보화	문화산업 및 관광 육성	문화 다양성 개인·사회의 풍요
	영역	문화기반시설 마련,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보존	지방문화 중흥,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생활문화공간 확충 지역 분권
지역문화 정책		전통문화 보존	지방문화 중흥,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분권 문화균형발전
축제·관광 정책		민속경연대회, 지방문화제 실시	지역문화행사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시작	문화관광축제 지원 본격화	국가관광명소제

자료: 류정아, 2008: 668; 필자 재구성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은 '문화의 분권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 정책의 '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는 단순히 인문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혹은 산업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문화가 사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은 창작, 향유, 교육, 산업 등이 복합적인 것이 되며, 이에 더하여 문화 개념이 비예술적인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장됨으로써 문화의 대상 범위가 실로 광범위해진다. 따라서 분권과 생활문화 및 문화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복합적 사고와 각 영역들의 협치가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문화예술정책은 노동 및 경제관련 정책과도 긴밀히 결합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문화산업 부문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여가 향유 확대를 위한 지역 관광산업의 특화와 관련 시스템의 확충,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의 정책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문화예술 영역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건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역의 입장에서는 분권과 문화민주주의에 맞는 정책적 준비들이 요구된다. 우선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맞는 정책 협치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행정의 지역협치 모델로서 구상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 문화시설 운영이나 단순 업무 등의 한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광중의 경우도 재원 확보나 전문성의 제고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민관 협치기구로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 업무의 상당한 이양과 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문화재단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또 지자체 행정과 문화재단 및 문화기관들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나눔과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청빙위원회에 더하여, 기관 운영에 문화예술인 및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공익이사제 등)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관련하여 좀더 체계적인 계획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도시 재개발이나 유휴 공간의 활용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강조하고, 건물의 개조와 활용에 이은 도시 이미지의 제고, 도시 재생의 선순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도시 재생의 핵심은 '문화·예술·사회·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잘 갖추어진 문화도시로의 재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거시적 계획을 지역 내부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와 연관하여 도시 재생 및 공간의 문화화를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즉 유휴재생공간의 창작 및 예술인 주거공간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의 활용,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미술관·영화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일상의 문화와 및 생활문화 확대에 따라 동네와 생활공간에서 문화 향유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생활문화는 정주지역 중심의, 그리고 문화시설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과 시설이다. 이런 점

에서 기존 생활 문화공간 운영을 네트워크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들 간의 연결을 위한 기반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특화 정책에 대한 지역 정체성 전략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와 문화균형발전 정책 속에는 각 지역들이 추구해야 할 '특화의 내용과 방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제안해야 할 몫이다. 즉 광주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지역에 결합되어 있는 이미지와 의미들을 배경으로 하여, 지역적인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담론을 통해 만들어지고 표출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 지역이 가진 다양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들에 대한 재검토와, 한편으로 담론의 주체로서 창작자, 매개자, 향유자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장적 숙의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발표문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염 방 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이행과제
1)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2) 문재인 정부의 문화관련 이행과제 배경
3) 문재인 정부의 문화관련 이행과제
4) 문재인 정부의 광주지역 공약

Ⅲ. 지역문화진흥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1) 법령체계 정비
2)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Ⅳ. 광주광역시 문화정책

Ⅴ. 지역문화발전 활성화 방향
1) 지역문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재원확충
2) 광주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Ⅵ. 맺은 말

[참고자료] 1. 문재인 정부의 문화분야 정책공약
2. 광주 시민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하는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추진과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염 방 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Ⅰ. 들어가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이다.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부들과는 달리 낡고 부패한 행정구조의 청산, 새로운 사회적 가치 및 삶의 방향성 제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문화를 문화답게, 예술인을 사람답게, 지역과 이념의 계층, 세대와 빈부를 넘어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며 살게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세웠다.

지방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 신 성장 산업 육성의 경제 기조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문화 전반에 걸쳐 펼쳐지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의 분출과 함께 새 정부들어 문화 정책의 기조가 변경될 것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의제가 있겠으나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만한 도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문화 발전이 요구된다. 지역문화가 지역문화 다워질 때만이 문화예술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예술생태계의 복원을 기하고 문화의 소외 극복을 위한 문화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 발전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문재인정부에서 제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련 공약의 이행과제를 통해 문화정책 방향을 검토해 보고, 새 정부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우리 시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이행과제

1)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청산해야 할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임을 강조하면서, "분권에 기초한 지역문화 진흥체계의 구축, 고갈 위기에 놓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 시장에서 소외받는 분야가 없도록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이 발표되었으며, 문화.예술.체육.관광이 함께 묶여 "약속12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으로 제시되면서 이 공약 하위로 8개 세부실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배경은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 등의 5개의 이념이 바탕이 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 또한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2) 문재인 정부의 문화관련 이행과제 배경

이행과제의 배경을 서술한 '왜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인가?'를 살펴보면, 첫째로 문화예술인 복지확산을 열거하고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팔 길이의 원칙을 전제로 '국가가 예술지원은 확대하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원칙이 담겨져 있다.

둘째로 향유, 참여, 창조와 함께 문화적 권리를 국민이 충족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 최종목표가 문화향유, 문화창조, 문화참여라는 것으로 국가가 의도적인 개입이 박근혜정부의 파탄으로 이어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셋째, 작업과 창작공간의 확대, 그리고 창작환경 개선을 통한 시장에서의 유통 등 예술인의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주 5일제 근무를 통한 여가문화 확대이며, 다섯 번째는 소외계층에게 소외가 되지 않도록 문화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통합문화이용권을 연계하여 문화누리 990억 이상의 예산으로 개인당 6만원의 혜택을 늘리도록 하겠는 것이다.

여섯째로는 한국관광이 여전히 문화컨텐츠가 부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있는 문화관광지의 콘텐츠 강화와 분산정책을 잘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3) 문재인 정부의 문화관련 이행과제

공약 '나라를 나라답게'의 문화분야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8개 이행과제 중 문화.예술은 6개 과제로 그 내용은 ①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②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③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다, ④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⑤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 ⑥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다. 이와 더불어 '편견·차별 없는 지원확대가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다'고 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주요한 문화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 세부내용 : 별지 참조

4) 문재인 정부의 광주지역 공약

새 정부의 정책 공약의 틀에서 출발한 지역의 공약에서 문화분야 광주공약에서는 지역의 고민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수도 광주'- 문화 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세 번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하고 있다.

Ⅲ. 지역문화진흥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1) 법령체계 정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 국정 기조에 '문화융성'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문화기본법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예술인복지법, 저작권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이 개정되어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인 문화관련 법체계가 마무리되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이 필요하여「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문화기본법 제정에 이어서 주요한 관련 법령을 보면,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문화융성을 위한 법령 체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①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②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 역량강화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Ⅳ. 광주광역시 문화정책

민선6기 문화예술정책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창의와 상상력이 어우러지는 '꿈꾸는 문화도시' 구현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과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광주의 경쟁력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첫째, 아시아문화전당과 어울리는 문화도시 조성, 둘째, 7대문화권 조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구축, 셋째,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시민자율형 문화예술 진흥, 넷째, 문화로 먹고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다섯째, 도시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도시 육성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한 7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전당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문화와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예술단체별로 각자 생활영역에서 개별사업으

로 추진해오던 다양한 사업들을 묶어 상설로 전환 배치하고, 전당 주변 보행환경 개선, 광주천과 금남로 야관경관 조성, 문화전당 둘레길 가로정원과 꽃거리를 조성하는 등 전당 주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를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문화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기반 구축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의 문화지도를 그려보고자 광주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문화실태조사와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기반 조성과 장애인과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예향과 도시에 걸맞은 전통문화예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위와 같이 민선6기 문화정책은 타율에서 자율로, 규제에서 독립으로 의존에서 책임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가 광주의 미래를 바꾸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광주의 경쟁력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팔길이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문화예술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서 '꿈꾸는 문화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Ⅴ. 지역문화발전 활성화 방향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과 함께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시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문화정책을 전면적이고 본질적으로 혁신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광주지역 40여개 시민문화예술단체가 시민 문화적 관점에서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문화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해 주도록 제안한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추진 과제」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추진과제 : 별지 참조>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과 광주시의 노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1) 지역문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재원확충

가) 문화진흥에서 문화분권으로

원리적으로는 문화분권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중앙에서 선정한 소위 '우수' 문화예술을 지역으로 순회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진흥의 관점이다. 향후 '문화자치'의 관점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지향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진정한 문화분권의 관점'으로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성과 도출에만 집중되면, 지역은 문화융성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지역은 계속 진흥의 대상으로 남는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표 16> 시대별 지역문화정책의 관점 변화 양상

단계별	정책관점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	중요 개선과제	주요사업
1단계	진흥 관점	중앙정부 주도로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진흥이 필요한 곳	문화격차	문화시설 건립 예술창작 지원
2단계	문화분권 관점	중앙의 문화정책을 상호협력을 통해 구현하는 파트너	전달체계	문화복지사업 (지역순회, 바우처)
3단계	문화자치 관점	고유한 문화자원이 존재하는 곳 문화민주주의가 구현될 삶의 터전	문화참여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원

* 자료: 라도삼, 2013, 지역문화재단의 재원 안정화 및 다변화 방안,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문화정책세미나 자료집 참조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향유 사업 등 지역문화재단들의 고유사업 영역에 속하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근에는 지역협력형 방식으로 국비 매칭 후 지자체의 위탁 방식으로 시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출처 차원에서만 보면 사업재원이 지자체에서 정부로 다양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지역협력형사업의 시발점이 정부 정책이고 그 집행 체계가 매우 엄격하게 지정되어 하달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역의 정책 결정권이 급격히 축소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진흥'에서 '문화분권'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나)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위사업별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지역단위 관련 사업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원 방식 개선하고 지역 내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는 문화관련 사업을 연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주기에 따른 매칭 비율 차등화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 지역문화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정은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1%를 달성하였고,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현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목표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흡하다(현 1.4%). 한편, 국가문화재정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문화재정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문화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의 획기적 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문화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가칭)'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안정적 지역문화예산 및 통합적 재정 정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목적세 신설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전향적인 추가 재원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확보 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로 할당함이 적절한 세원을 발굴하고 세법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가칭)지방문화세를 신설하고 신규 세원으로서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6)]

2) 광주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은 시민의 삶과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결되어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광주시의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은 만족하지 않지만 자치구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동호회 지원 확대 등에 의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2015년에 임택 의원의 발의로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은 점진적으로 증액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민선5기 대비 83% 상향된 100개의 동호회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문화예술 강사 파견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반시설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에는 총 39억원이 투입되어 3개소가 기 조성되었고, 4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다. 또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한마당을 개최해 왔다. 청년들의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생활문화예술활동 동호회 지원시 청년쿼터제도 도입하였다.

따라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는 개인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재생산 차원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동호회 활동 공간 마련 등 활동기반과 관련된 간접 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치구별 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동호회 활동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동호회 실태조사, 동호회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동호회 한마당 개최 등 재정의 허용 범위안에서 단계별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많은 정책이 있지만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도적인 부분과 실행적인 부분에서 2가지만 짚어 보았다. 문화 정책은 결국 지원의 문제다. 많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원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면 그것이 또 다른 차별이 된다. 문화지원금을 현실화 하면서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6) 서울특별시, 201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재구성

VI. 맺은 말

문화가 인간의 삶은 물론 사회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대이고, 도시재생과 발전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는 추세다. 한 지역의 문화예술적 경쟁력은 그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수준과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행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휘되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 하는 것은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정책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도시의 문화력은 더욱 증진될 것이다.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문화정책의 핵심은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바탕위에 우리 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고품격의 문화도시 조성과 남도인의 예술적 끼가 살아 숨쉬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의 거점도시 조성과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광주만의 브랜드 개발에 역점과제를 두고 추진 중에 있다.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주말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와 야시장 등을 연계한 문화예술 축제를 전개하고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실태조사와 청년문화실태조사, 우수한 예술인들의 역외유출이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하고,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민생활의 질을 높여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화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새로이 들어선 정부와 지역문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나아갈 방향,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1]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공약**

1. **예술인의 문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경제적 권리,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마련
-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앵떠르미땅) 도입추진
-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2.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일자리확충
- 민간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3.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
- 동네 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4.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 환경구축
-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구축
- 4차산업 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지원

5. **공공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매장문화재발굴비용 국가지원 확대
-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 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6.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문화균형지수 개발, 낙후지역우선 지원
   -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 자율성보장
   -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참고자료 2]

제19대 대통령 선거

광주 시민문화예술단체가 제안하는
문화정책 방향 및 10대 핵심 추진과제

□ 문화정책 방향

▲ 문화 분권을 통한 문화 민주주의 실현
▲ 기초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청년에'연결기회, 시간, 활동'지원을 통한 청년 문화 생태계 조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로 문화도시 광주 실현

□ 10대 핵심 추진과제

1. 팔 길이 원칙 실현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보장
2.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공익 이사제 도입 및 지역 참여 비율 확대
3. 문화예술진흥기금 재 조성 및 지역문화 분권 실현 방식으로 분배
4. 광주역사박물관 건립,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 미디어아트 창의파크 구축
5. 청년 문화 육성 지원법 제정
6. 청년복합문화공간 건립, 청년문화인 기본소득 보장, 청년문화인 뉴딜 일자리 창출
7. 조성사업 특별법 시효기간(2026년->31년) 및 조성사업 목표기간(2023년->28년) 연장
8.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비 비율 확대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추진단 정상화, 문화전당 운영협의회 구성
10. CT연구원 설립의 조속한 재 추진

【참고문헌】

1. 2016년 광주문화지표조사, 광주문화재단, 2016.12.15.
2. 2015~2019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광주광역시, 2016.12.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18연차별실시계획, 2017.
4.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역량강화 방안, 광주전남연구원, 2017.1
5. 광주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전략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2015.1

토 론 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

김 병 석 (아시아문화원장)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문화예술을 비롯한 각 분야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포함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오늘의 포럼 역시 이러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안과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 생각한다.

현대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산하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참여를 증진하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두 가지 정책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 신임 문화부장관도 취임사에서 지역간 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분권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새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기저로 하여 그간 제시된 5개 문화권리와(자유권, 창작권, 경제권, 향유권, 자치권) 3대 기본원칙(자율, 분권, 협치)을 근간으로 한 정책사업 구체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레버리지가 어떻게 작용하여 문화전당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문화권 사업 활성화가 포함되어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이 기재부와 내년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

전당의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은 아시아 각 곳(지역·나라·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국내외에 유통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지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문화원과 전당의 이런 노력은 아직 초기이나 지역문화계에서 조금씩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광주의 문화적 상징인 전당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의 문화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적 맥락을 만드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참여주체의 각 입장에서의 관점과 기대라는 틀을 통해 투영되는 전당이라는 '상(像)'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원과 전당은 '15년 11월 공식개관 이후, 그간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다양한 상들의 교집합을 확인하고 운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산하기관·단체, 문화원 및 전당의 다양한 협력사업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시립극단·발레

단 및 시향과 지역예술단체 등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들이나 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하는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들은 더욱 확대될 지역문화 활성화의 좋은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있어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원과 전당이 지역문화예술계와 소통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화원과 전당이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부족한 상황임이 사실이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과 전당의 역할은 앞서 염방열 실장님, 박해광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방향을 기초로 하여 분석했을 때 **'협업·발굴과 재조명·육성'**의 세 가지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협업'**은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들과의 공동제작과 유통방식이며 최근 멕베스 411(시립극단), 로미오와 줄리엣(시립발레단) 등 제작사례를 들 수 있다. 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과 전당과 문화원의 시설과 전문인력 및 예산을 매칭하여 퀄리티를 높이고 제작비용의 절감과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전국단위의 홍보와 유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단체의 역량강화와 타지역으로의 유통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술가는 1인 기업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작품활동과 홍보, 마케팅을 혼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문화전당과 문화원은 우선 미술분야를 시작으로 지역예술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오픈한 로터스 랜드는 2-30대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여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전시중이다. 6월에는 우리지역의 대표 원로화가인 황영성 작가 초대전을 오픈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소개하여 **'재조명'**하는 등 마케팅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전당이라는 시설과 규모의 이점을 활용한 지역예술가의 발굴을 통해 역량있는 신진 지역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역량있는 중견 작가들을 재종명하여 그들의 작품활동과 외부 소개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은 공연, 전시, 융복합미디어, 교육, 축제 등을 직접 기획·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직종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종종 보게 된다. 때문에 각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술극장을 운용할 수 있는 무대기술 전문인력, 미디어시티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조차 다양한 미디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시 테크니션을 구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현재 전시 테크니션, 축제기획자, 문화교육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당의 당초 기능 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 기반강화를 통해 각 전문분야의 포스트 교육과정 등 보다 심화교육을 통해 전당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박 강 배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2011년 1월 설립된 광주문화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담당함.

1.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3.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4.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7.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8.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재단 설립 7년차에 즈음하여 그간 담당했던 업무를 검토해보면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은 과도했고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은 부족했으며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은 거의 이루지 못함.

새정부의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이루고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경제권, 문화향유권, 문화자치권을 이루기 위해 문화재단은 몇 가지 방향전환이 필요함.

1. 생활문화 확대,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최근 2년 사이에 시작한 생활문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의 방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동아리 현황파악, 청년 문화 향유 실태 파악 등의 기초조사를 강화해야 함.

2. 지역문화 특화를 이루기 위한 기구로서 문화재단의 전문성 강화요구를 적극 시행하고 협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문화재단과 예술인들의 전문성을 강화 하는 교육훈련을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문화단체협의회(12개 기관으로 구성됨.)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특히 새정부의 문화정책을 다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은 아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자 함.

3-1. 문화다양성 보장 활동, 사회적 약자와 문화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평등권 보장 활동 강화

3-2.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욱 많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 마련

3-3. 생활문화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지역밀착형 생활문화를 진흥하고 상생 기반 마련

3-4. 지역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예술가를 광주에 정착케 하는 기반 마련

시민참여와 협치, 그리고 지역문화

박 진 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2003년 제1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출범할 때만 해도 광주시민들은 조성위원회의 화려한 면면에 고무됐다. 총리급 예우를 받는 조성위원장의 지위도 그렇고, 15개 부처 장관들과 각계를 대표하는 명망가들로 구성된 조성위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문화수도 광주의 물길을 열어주는 조타수가 될 것이란 믿음을 갖게 했다.

하지만, 조성위원회는 심의기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당시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이 '취사선택한' 안건을 심의할 뿐, 그 어떤 사안이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조성위원회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와 같은 굵직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문광부가 내놓은 문화전당 공모당선작으로 연일 지역사회가 들끓었지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문화중심도시 추진방향을 놓고 문광부와 광주시가 대립각을 세울 때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조성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2기 조성위원회의 청사진 역시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2기 수장을 당시 송재구 위원장은 더 이상 문광부의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15개 정부 각 부처에 문화중심도시사업 지원팀을 설치해 조성위에 힘을 실어달라는 것과, 조성위 산하에 기획단을 설치해 날개를 달아달라고 제안했다. 말하자면 허울뿐인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그동안 문광부 추진단의 독선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지역의 민심이 반영됐다. 일련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지역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추진단의 '밀어 붙이기'는 문화도시의 주체인 광주시민들을 극도의 소외감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대역사에서 시민참여와 협치가 배제된 것이다.

협치 빠진 '문화수도'

지난 2002년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를 내건 고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의 씁쓸한 현주소다. 핵심 시설인 전당의 사정이 이럴진대 전당의 에너지를 7개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7대 문화권사업은 말해 무엇하랴. 예산, 인력, 조직, 콘텐츠 등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홀대가 빚어낸 '총체적 참사'라 하겠다.

그래서일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지역의 기대는 유별나다. 아니 절박하다고 해야 맞겠다. 전문가들은 조성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복원을 첫 번째로 꼽는다. 지난 2003년 이후 조성사업과 7대 문화권을 총괄해 왔지만 2015년 4개 과 40명에서 1개 과 8명의 '미니 조직'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정상화는 조성사업의 '핵심 퍼즐'이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조성위는 총리급의 위원장과 10여 명의 조성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스케일이 무색하게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초창기 조성사업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에 전혀 쓴소리를 못 내 '들러리 조성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도약기에 진입한 조성사업을 위해선 조성위가 사업 주체인 문체부와 문화전당 및 광주시를 중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조성사업은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예산, 조직,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 못지않게 7대 문화권 사업과 주요 현안을 풀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와 염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맞는 정책 협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박 교수님의 주장은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박 교수님의 지적대로 광주문화재단은 문화행정의 지역협치 모델로 기획됐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광주시의 위탁사업이나 전시, 공연 등 사업에만 치우쳐 고유 업무인 연구와 정책개발, 문화예술교육 등에는 소홀해온 게 사실이다. 민관협치 기구로 거듭나려면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위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문화정책인 생활문화 확대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계발하고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광주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이들의 활동과 공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의 사랑방클럽처럼 도심의 빈 건물이나 공간을 임대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들의 연습실로 제공하는 한편 동호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재단의 부속기관인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독립기구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본다.

광주시, 전당, 민간 거버넌스 구축

최근 광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지난 2002년 부터 추진해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2014년 스타트를 끊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 2015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공식개관 등은 성공 여부에 따라 광주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 메가 이벤트가 탄력을 받도록 지역 문화정책들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문화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민선6기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6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광주민예총 등 예술·시민문화단체가 개최한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와 발전방안'시민포럼이 대표적인 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시의 문화정책과 행정 분야가 특색이 없고 민선6기의 색깔을 보여주는 문화

정책도 부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문화콘텐츠밸리 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한 조직의 문화업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한다. 문화마인드나 식견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문화에 대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화행정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히 '비문화적'이다.

실례로 광주시에는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사업과 시 문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문화체육정책실이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 교체와 낮은 전문성으로 굵직한 문화이슈들이 얽힐때 마다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역대 문화정책실장들의 재임 기간이 평균 6개월~1년에 불과한 것은 '문화'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잘 말해준다.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이후 2년 동안 문화전당의 수장은 방선규 전당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지만 협치의 파트너인 광주시의 문화정책실장과 문화수도 정책관은 2~3명이 교체됐다. 이같은 상황에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협치의 관계를 맺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시가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문화부시장) 구축과 전당과의 정례협의회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광주문화재단의 위상 제고, 아울러 지역대학과의 문화인재양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 포럼 등과의 파트너십 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에게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논란과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를 둘러싼 협치와 소통의 부재로 3년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뼈아픈 기억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수년간의 논란으로 지연돼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두 번 다시 전당의 '잔혹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역문화와 인력: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김 인 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21세기를 일컬어 흔히 세계화의 시대라고 한다.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사회구조적 함의는 국제적인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의 증가로 인한 급진적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세계화를 민족국가들의 약해진 정치적 자율성과 전통문화 파괴의 주범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세계화를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해석해 왔다. 실제로 세계화란 단어는 여전히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세계화의 혼돈 속에서 문화는 상실된 자기정체성을 찾아주는 묘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지역문화라 함은 한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인들의 공동체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지역이란 지리적인 관점과 인문·환경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통상 쓰는 '지역'이란 뜻은 지리적 관점으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라고 볼 수 있다. 인문·환경적 관점으로 보면 지역은 언어, 문화, 기호 등 공간적 범위 내에서 고유한 성격을 지닌 지역성의 총체로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근래에는 지역을 단순히 지리·행정학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대신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시로, 지방이란 말이 통상 '비수도권'을 뜻하는 말로 표현되어 왔다면,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인류학적 층위의 개념으로 특정한 '지역공동체'를 함축하는 좀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라는 표현은 현실에서 매우 협소한 활용수준에 멈추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일반적으로 지역문화를 논할 때 우리는 통상 전통문화, 민족예술, 또는 지역의 특성, 역사 등 지역적 대표성을 띤 무언가를 주제로 다룬 '문화'만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구성원인 동시에 특정 지역의 '지역인'들이며, 모든 문화인력들은 어

딘가에 속한 '지역문화인력'들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또한 그 지역의 역사나 전통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닌, 다분히 동시대적이며 일상을 담고 있는 생물(生物)로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문화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단순히 역사성, 전통성 또는 대표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에서 벗어나 (세계화를 포함한) 동시대성과 그 지역인들의 일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와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특정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문화의 인력이 지역의 인재만을 중심으로 등용되는 것이 절대 참이라는 명제는 무척이나 폐쇄적이고 지엽적인 판단이다. 특히 '문화전문인력'이라는 용어자체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역 또는 지방을 얼마나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공공기관의 인력 문제만으로 지역문화와 인력의 문제를 좁혀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바른 인지가 부재한 상태의 '지역문화 바라보기'일 뿐,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문화는 단순히 역사성 뿐 만이 아닌 동시대성, 즉 지향성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즉, 지역문화는 과거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미래사를 전망하는 정신적 개념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에서 지역문화를 정의하고자 하는 까닭은 지역문화의 인력, 그리고 그들의 생존과 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자는 의미에서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의 인력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행정인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서 역사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 기획자, 행정가, 언론인 등 다양한 인력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은 단순히 이 '지역의 출신'만이 아닌 광주의 역사성과 지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타 지역의 문화인력들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광주가 비로소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청년 분야-

정 두 용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1. 발표문을 읽고 든 하나의 질문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문화정책: '꿈꾸는 문화도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정책은 그 철학과 비전 자체가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았던 데 비해, 이번 문재인 정부와 민선6기 문화정책 모두 그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비전이 잘 실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해광 발표자가 언급한 대로, 지난 정부의 정치적 파산을 촉발했던 주요 원인이 문화정책에 있었던 것에 비해 대선 공약에서 문화정책이 그다지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10대 대선공약과 대선후보 공보물에서 바로 체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왜일까???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비전이 설명 그대로라면 이렇게 비중이 작을 수는 없을 텐데... 혹시 철학과 방향성, 비전이 구호로만 있는 게 아닐까?

2. 문화 계몽주의와 문화 자본주의를 넘어서

백범 김구 <나의 소원>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

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개인의 행복이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3. KT&G 상상마당 광주, 상상에서 현실로

광주광역시청년종합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청년들의 놀이 및 창작 공간 확충이 23.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 공간(공연장 등 활동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청년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하자면 바로 '문화 공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KT&G와 부산광역시가 지난 5월 24일 'KT&G 상상마당 부산'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상상마당은 2007년 수도권(홍대), 2011년 충청권(논산), 2014년 강원권(춘천)에 이어 2019년 경상

권(부산)에 잇따라 개관하게 되었다.

복합 문화 공간 '상상마당'은 KT&G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해 연 방문객 180만 명, 3,000여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상마당이 전국 권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반가움과 함께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권역에서 상상마당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전라권뿐 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로써는 다른 권역보다 전라권이 우선 진행될 것이라 기대해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상상마당 광주 조성을 상상에서 현실로 바꾸자. 상상마당 부산 조성과 동시에 상상마당 광주 조성이 진행되도록 광주시청, 시의회, 문화인, 시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자!

그리고 이 공간이 단순 하드웨어로서의 공간, 문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 문화공급 공간을 넘어선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현실화되는 그런 공간으로 말이다.

다른 방안들은 시간 관계상 붙임의 글로 갈음한다.

<붙임>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 제안 –청년 분야 중심으로-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 글 중 발췌-**
- 이번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은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을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에서 최대한 제한을 낮추었습니다. 둘째로, 지원 액수를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의미가 있고 목적에 맞다면 1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담대한 구상을 담아보려는 의지입니다. 셋째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건비 사용을 프로젝트 예산 중 50% 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친화적인 혁신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지원사업의 틀을 넘어 항목 지원을 열어 두었습니다.

1. 제안배경

- 청년문화예술인 86%가 문화활동으로 인한 월수입이 50만원 미만
- 현재 문화정책의 기조는 물고기를 잡아주거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인데, 현실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강이나 바다 자체가 부족
- 심지어 많은 지원 사업이 정당한 인건비 책정이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자체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의 경우 행자부 지침을 따르면서 내부인력 인건비 책정이 안 되면서 열정 페이가 되는 경우가 많음

2. 기본방향

- 청년문화인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정책은 '내가 하고 싶은 문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며 먹고 살기'이며, 일반 청년은 '삶과 일상으로서의 문화' 즉,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임

▶ 이 둘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해야 함

첫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

둘째. <물고기를 잡을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

3. 정책제안

▶ '사람'에 대한 지원과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문화인들에게 <시간>, <공간>,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법' 제정 필요

1. 청년문화인 당사자 주도형 뉴딜일자리 창출
2.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청년문화인들의 정당한 인건비 책정 *법률 제정
3. 광주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4. 각 자치구별 청년 거점 공간 <청년문화의 집> 조성
5. 청년 문화인 기본소득 보장
6. 일반청년의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기본권 소득 제공 등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7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7년 7월 6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7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